

미·중 갈등 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김예경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일 시 2020. 7. 28. (화)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입법조사처

CONTENTS

- I. 미·중 갈등 현황과 중국의 입장
- II.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



I . 미·중 갈등 현황과 중국의 입장



1. 미·중 갈등 현황

- 2018.1. 무역분쟁 계기 미·중 갈등 본격화

- 영역 :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기술 영역 + 규범, 가치관, 이념

- 주요 갈등 사안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경쟁

- 남중국해 분쟁, 홍콩 및 중국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

- INF 아시아 배치 문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 화웨이 제재 문제 등



1. 미·중 갈등 현황

- 미·중 갈등의 본질

- 미·중 갈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

- 미·중 간 국력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칙과 관계 설정 모색의 전환기

- 미·중 간 국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의 글로벌 우위 사수

- 미·중 경쟁 특징

- △ 미·중 간 경제 및 기술경쟁 고조 △ 아·태지역 집중

- △ 안보와 경제 어젠다 경쟁 △ 리더십 경쟁 △ 이데올로기 경쟁 등



2.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 중국은 안정적인 국내외 환경 조성 추구
 - 2020년은 ‘13·5계획’ 마무리 해
 -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목표 중
첫 번째 백 년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완수의 해
 -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수립,
빈곤문제 해결 치중



2.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중국의 대외적 수사(rhetoric)
 -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永不称霸, 永不扩张)
 - 인류위생건강공동체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 재개 등
 - 중국을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할 것임
 - 다만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완정, 국가통일 등 소위 '국가의 핵심이익'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시킬 수 없음(任何情况下都决不牺牲国家核心利益)



2.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 미·중 관계 관련 중국의 입장
 -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의 공동이행 위한 협력 강조
 - 미·중 양국 관계가 신냉전으로 발전하는 데 반대
 - 미·중 관계 단절(decoupling)은 국제사회에 이롭지 않으며,
경제분야 협력 강조
 - 미·중 양국은 상대방 핵심이익 존중하면서 윈윈의 길 모색 필요



2.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 다른 한편 중국은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블록 구축 추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 목표, 한·중·일 FTA 추진
 - 미·중 관계 디커플링 대비
 - 2021.3. 제13기4차 전인대 ‘14.5계획’ 발표 예정
 - 내수진작 통해 대미 경제 의존도 줄이면서, 사실상 디커플링 수순
 - 미·중 수교 40주년 교훈, ‘합작양리, 투족구상(和则两利,斗则具伤)’



II . 한국의 대응과제



1. 미·중 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 한국의 양자택일 딜레마
 - 미 백악관 '대중국전략보고서(US Strategic Approach to China)'
 - 한국 포함 역내 동맹국에 대 중국 대항 안보지원 참여 촉구
 - 미국의 반(反) 중국 경제동맹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가입 제안
 - 한국 사회 내 이념, 가치관, 의리, 명분, 국익 논쟁 가열 가능



2. 대응과제 I: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성 정립

- 첫째, “한·미 동맹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중 우호관계 유지”
 - 한국 사회 내 동의 필요, 그러나 한국 언론 및 여론은 중국에 비우호적
 - 미·중 갈등 대응의 경직성 탈피
 - 미·중은 갈등과 경쟁 반복하면서도 ‘대화’ 지속
 - 미·중 간 무역분쟁 과정 복기 필요: 분쟁 격화 →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 포괄적 경제 대화(CED) 재개 합의 → 1단계 무역 합의
 - 따라서 미·중 갈등 프레임에 갇혀 선택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유연성 필요



2. 대응과제 I: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성 정립

- 둘째, 협력적 다자안보질서 구축 촉구

- 미·중 갈등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서 주변국 피로도 발생

- 미국과 중국 리더십에 대한 실망과 불신 초래

-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양면과제 해결 시급

- 미·중 갈등으로 북핵문제 주변화 위기

- 갈등과 경쟁보다는 평화와 공존·공영의 가치 공감대 형성 필요

- 한국은 강대국 세력 경쟁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다자안보질서 구축 비전 제시

-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통해 주변국 지지 확보



3. 대응과제 II: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첫째, 한국의 외교적 대응 역량 강화
 - 미·중 갈등 장기화 우려,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외교부 내 북미국(미국), 동북아국(중국) 등 지역국 개별 대책 수립
 - 부처별, 부처내 실국별 입장 조율 필요, 종합적 전략 및 현안 조정
 - 외교부 내 미·중 갈등 대응 전담기구로 '전략조정담당관' 신설 예정
 - 좀 더 '전략·기획' 기능이 순발력 있게 발휘될 수 있는 대응조직으로 역량 강화 필요
 - 또한 미디어 대응·경제·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 확보 방안 검토 필요



3. 대응과제 II: 세부 추진방안 수립

- 둘째, 주변국의 미·중 갈등 대응 사례 수집 및 분석
 - － 미·중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들은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추구
 - －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양분화
 - UN 제44차 인권이사회(6.30), 홍콩보안법 관련 공동성명 발표
 - △ 지지: 쿠바 등 53개국(중국, 캄보디아, 중앙아, 콩고,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가ambia, 라오스, 모로코 등)
 - △ 반대: 영국 등 27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 － 주변국의 대응 동향 파악
 - 한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대문화 등 166개) 및 코트라(KOTRA) 등 활용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감도]

(단위: %)

순위	국가	비호감	호감	순위	국가	비호감	호감
1	일본	85	14	17	인도네시아	36	36
2	스웨덴	70	25	18	남아프리카	35	46
3	캐나다	67	27	19	폴란드	34	47
4	한국	63	34	20	리투아니아	33	45
5	프랑스	62	33	21	그리스	32	51
6	미국	60	26	22	브라질	27	51
7	네덜란드	58	36	23	이스라엘	25	66
8	이탈리아	57	37	24	케냐	25	58
9	체코	57	27	25	아르헨티나	24	47
10	호주	57	36	26	레바논	22	68
11	독일	56	34	27	멕시코	22	50
12	영국	55	38	28	불가리아	20	55
13	필리핀	54	42	29	러시아	18	71
14	스페인	53	39	30	나이지리아	17	70
15	슬로바키아	48	40	31	튀니지	16	63
16	헝가리	37	40	32	우크라이나	14	57

※ 주: '모르겠다'는 답변은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자료: Laura Silver, Kat Devlin, Christine Huang, "People around the globe are divided in their opinions of China",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30, 2019. 재구성



3. 대응과제 II: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셋째, 사안별 대응, 특히 우리 기업의 입장 파악

<화웨이 제품 보이콧 관련>

- 미 화웨이 제품의 보안상 위험성 경고, 주변국 보이콧 요구
 - 한국 LGU+에 대해서도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 촉구
- 우리 정부, “민간부문에서 장비 도입은 정책적으로 기업 자율적 결정 사안”
- LGU+, 전국 24만개 LTE 기지국 중 서울 수도권 9만6천개(30%) 화웨이 장비
 - “화웨이 장비 교체는 천문학적 비용 손실 초래



3. 대응과제 II: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세계1위(30%), 5G 기술 기여도 세계1위,

5G 특허 보유 세계1위(미국 퀄컴 5위, 인텔 7위)

· 5G 경쟁의 승자가 약 12조 달러 세계시장 선점 가능

— 미·중 기술패권경쟁 대응 시 고려사항

→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국가이익, 기업의 입장, 외교적 자율성”

[국가별 화웨이 채택 및 배제 현황] (2020.6. 기준)

채택	부분 채택, 기업별 결정, 미결정	배제
남아공,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레인, 베트남, 벨기에, 북한, 이탈리아, 태국, 폴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프랑스, 한국	UAE, 덴마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감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